社說

본격적 대정부투쟁 전개할 시기

—故 강경대열사의 죽음이 주는 의의

故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접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열사와 직격탄에 희생된 이한열열사를 한 번쯤은 떠올렸을 것이다.

이번 강경대군의 죽음은 87년 당시의 박종철열사의 죽음이 가져왔던 파장만큼이나 현 정세에 있어 커다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생 및 재야는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제2의 6월항쟁을 재현하려는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대학 또한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향후 투쟁의 성패를 가늠지을 수도 있는 시민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투쟁의 대오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그 이유는 6월항쟁이 호헌철폐라는 이슈와 더불어 공안정국에 억눌렸던 시민들의 분노가 박종철열사 고문치사로 분출된 반면에 현 노태우정권은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대 국민 최면술(?)로 흔히 중산층이라고 불리워지는 광범한 대중들에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故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전경과 학생사이의 폭력적인 대결에서 기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제도권언론과 정치권의 작태들도 대중들과 민주세력과의 괴리를 줄이는데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집회에서 외치고 있는 '백골단 해체'등의 구호는 현 상황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이번 사건이 '백골단해체'로 종식된다면 이는 또다른 진압기구의 창출을 묵과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물론 故 강경대군의 죽음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가열찬 투쟁은 기존에 수세에 몰려있던 민주세력이 현 정부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성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노태우정권과 민자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제반 부조리와 모순점들은 결코 개혁될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캠퍼스별로 고양되고 있는 민주화의 의지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중들과 더불어 대정부투쟁의 장에 함께 할때, 비로소 6월항쟁의 성과보다 한층 발전된 민주화의 장이 열릴 것이다.

오는 9일 민자당분쇄투쟁과 5·18광주항쟁기념주간, 5월말의 전대협 출범식등 계속적인 투쟁일정이 잡혀있다.

이러한 집회나 일상적인 가두투쟁을 통하여 이번 사건은 구조적 폭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백골단해체 투쟁이나 내각사퇴투쟁등 개량화 가능성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투쟁방향에서 탈피하여 노태우퇴진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경희학과' 형성의 새로운 장을 열자

—모스크바 국립대학과의 자매결연에 부쳐

지난주 우리경희학교는 소련 제일의 대학이라는 일컫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경희의 해외 자매결연대학은 17개국 총54개교가 되었고 그 양으로 볼 때 국내의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전까지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을 점검 한다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외형적 규모에 비해 내용적으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매결연의 추진만큼 자매결연 이후의 실질적 교류가 괄목상대 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실질적 수혜자가 되어야할 일반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경희는 국제화 시대에의 대비와 세계적인 명문私學으로의 발돋움이라는 목표 아래 1985년 국제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정력적인 노력과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워왔다. 즉, 양적차원에서 물론 소기의 목적은 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자매결연의 체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형태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물론 이에 대해 국제교류위원회는 "인적교류 차원에서 학생을 자매교에 파견하려 해도 지원자나 해당자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교류의 방법은 유학생 파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 견학이나 펜팔, 또는 자료교환등의 교류도 생각해 볼 수 있음직하다. 오히려 그러한 교류가 보다 많은 일반학생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혜택일수 있다.

국제교류위원회는 학부생의 재학중 해외자매교 파견·연수와 학점교류라는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구체화 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제교류위원회는 이것외에도 많은 건설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을 것이며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효과적인 교류사업을 위한 구상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대학과 체결한 자매결연은 그동안 적성국가로 치부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했던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 결연이 우리가 항상 염원해왔던 경희학파형성의 새로운 장으로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희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거보를 내딛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의 역사를 1백년으로 잡는다면, 1/3은 외적 성장기, 1/3은 내실기, 1/3은 사회에 대한 기여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대학은 올해로 개교 42주년을 맞이한다. 바야흐로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국제교류역시도 우리대학은 나름대로 충분한 외적성장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듯이 질적 향상을 도모 해야 할 때이며, 아울러 그 실질적 혜택이 일반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바람직한 교류형태를 확립해야 할 시기라하겠다. 또한 경희인들 역시 국제화시대와 자기완성을 위해서도 면학에 게으름없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매체비평

양비론으로 묻혀가는 열사의 뜻

한국언론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과연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 역기능만이 심화되고 있는가?

지난주 주요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매우 부정적인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강경대군 치사사건'은 역설적으로 말해 제도언론의 한계와 오류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간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문에 가리워져 있던 각 일간지들의 성향과 논조는 이러한 '중대사건'을 맞으며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초부터 신문의 머릿기사를 장식했던 '강경대군의 사망'을 기사화하는데 있어 각 일간지들은 거의 비슷한 논조로 사건소식을 전했다.

대부분 '강경진압—예고된 죽음'이라든가 '전투경찰 운용상의 오류'등 공안통치의 산물이라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사건 자체가 내포한 의미를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건이후 정부가 여론의 십자포화로 인한 수세속에서 헤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부터 공교롭게도(?) 언론의 보도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각 일간지의 사설을 보면 얼핏 정부를 비판하는듯 하지만 오히려 정부측 입장을 옹호하는 논조임을 알 수 있다.

가령 동아일보 5월2일자 '학생의 죽음과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사설을 보면 내무장관·국무총리의 사과등 간략한 처방을 내놓은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종국에는 경찰법·집시법의 개정이라는 '제도권내에서의 개혁'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경향신문 4월28일자 '공안시국이 부른 禍'라는 제목의 사설은 "6공 정부가 탄압정권으로 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노대통령의 정치적 설득력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5월3일 노대통령의 특별 담화문 발표를 통해 그 실효를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잉진압'對 '과격시위'를 대비시켜 양비론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일간지 기자의 말처럼 5공시절의 '무탄무석'對 '무석무탄'을 연상케 하는 작금의 논쟁은 '양쪽 다 문제가 있다'라는 제삼자의 한편으로는 소모전을 조장하는 듯한 논리로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쟁의 본질과 원인규명에 있어서 언론들은 너무나 인색한 모습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인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의 본질을 궤뚫지 못하고 외곽을 맴돌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인정하기가 대단히 불쾌한 일이지만 정국을 무마시키려는 정부의 제스처와 언론의 보도내용은 미리 연습이라도 한듯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특집부〉

시론

◇경찰법 제정과 중립화 방안

권력에 묶인 중립화

예산, 인사의 독립권 보장 우선돼야

견제와 감시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시급

한국사회에 있어서 군기무사, 안기부, 경찰공안기구 및 준군사집단인 전투경찰대등의 사용에 의해 국가의 폭력적 지배양상이 일반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시국치안을 담당하면서 법초월적 존재로서 민중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정점으로한 경찰조직은 그 기능상 파시즘권력의 기동대·집행자라는 폭력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 젊은이를 살해한 경찰권력의 제도적 폭력성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의 가능성을 경찰역사 및 현재의 모습과 정부제출 경찰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시대 경찰은 제국주의지배세력의 앞잡이로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파괴해 왔고, 그러한 경찰의 속성은 해방후 미군정치하의 국립경찰대의 설립으로 유지되어 온게 사실이다.

현재 총 가용경찰력 약15만명중 전투경찰의 비중이 약7만명이고, 경찰예산의 태반이 치안작전 활동비 명목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현재의 경찰기구의 주요활동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내무부직제(대통령령)중 치안본부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치안본부장을 정점으로 한 기구및 조직체계가 거의 절반이상이 정보정치 경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파시즘정권을 떠받치고있는 경찰조직내의 또하나의 지주인 전투경찰대는 원래 박정희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군대 정원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독자적인 지휘에 복무하고, 충실하게 민중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별동대형식의 군사조직의 필요에 의해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창설하여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에 한정된 법률상 임무를 위반하여 상시적인 시위진압을 통해 독재정권의 사병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경찰제도에 근거한 경찰의 관료적 비민주성과 경찰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히 87년민주화대투쟁 이후 경찰조직의 민주화·중립화요구로 표현되었으며, 경찰내부(국립경찰대학 총동창회및 재학생일동의 경찰중립화 요구성명 및 탈영 전·의경의 양심선언등)의 움직임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리하여 1989년말 임시국회에 평민·민주양당의 경찰법안 제출과 이후의 정치적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친후에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의 경찰법(이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주요골자는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의 설치, 지방경찰기구로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서를 설치함 ②경찰의 인사·예산·장비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의 설치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제출안이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정권의 자의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 엄청난 물리적 폭력기구들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개편되어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조직범죄를 민중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때 과연 얼마만큼의 실질적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내무부의 외청형태로서 '경찰청'의 설치는 그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의 완전한 보장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경찰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의 실효성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원래 의미가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제도원래의 의미가 경찰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정치권력에 일정정도의 견제와 감시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경찰위원회에 대한 민중의 통제가 보장되지 않을 때 경찰에 대해 '정치적중립기관'이라는 정당성만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찰의 중립화문제의 논의시 항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2원적·독립적 경찰조직의 편재. 즉 지방경찰조직의 민주적 기관으로의 재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지방경찰이 확실히 중앙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구로서 재편되기 위해서는 그 권력구성의 방식에 있어서 각지방 경찰서창의 주민직선과 경찰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통제등이 필요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법적보장책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논의속에서 민중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제도적 폭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과 이에대한 통제장치의 확보를 위한 투쟁의 과정속에서 경찰법안의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정치경찰위주로 파행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오고 정권보위의 최첨병으로서 물리력의 행사를 자행한 것이 결코 법적 통제장치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즉, 경찰이 국민의 권리·생명 및 재산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본래의 경찰기능의 확립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조직이 국민의 의사가 아닌 독재권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파시즘권력하에서 그러한 기관들의 설치가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국민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하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권력기구의 민주성·독립성의 확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의 담지자인 민중들의 정치투쟁의 과정속에서 민중에 의한 경찰력의 지배·통제의 실현으로 확립될 수 밖에 없다.

단지, 현재의 상황과 조건하에서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을 뒷받침해주고 민중의 인권을 탄압하는 제도적·법적장치의 철폐와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실질적인 경찰중립성보장의 법제화의 과제는 시급히 실현되어져야 한다.

편 판 중
〈법학·84졸〉

(고)(황)(만)(평)

'위기일발'

폭력경찰 살인만행에 대한 전대협 결의문

얼마나 많은 젊음이 쓰러져야 민주의 꽃이 핀단 말인가!

4월26일 오후5시30분 명지대 청년학생들의 학원자주 완전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시 진격투쟁도중 명지대 경제학과 1년 강경대학우가 폭력경찰의 교내 난입과정에서 백골단 5명에 의해 각목과 쇠파이프로 무참히 구타당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일이 발생하였다.

조국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을시 맨주먹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자 바로 청년학도였다. 민중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시 불타는 청춘으로 애국의 시대를 열었던 자랑찬 백만학도의 대중조직 전대협이 있다. 전대협과 백만학도를 압살하는것은 조국과 민중을 짓밟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은 故강경대학우의 죽음에 비통한 가슴으로 애도를 표하며 피끓는 심정으로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백만학도의 입장과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故강경대학우 구타살인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오랜동안 자행되어 온 노정권의 장기집권 획책과정에서 애국민중을 탄압하고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광폭한 물리적 탄압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겠다.

노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는 극에 달해 민중의 삶을 폭력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짓밟지 않고는 자신의 권력을 한시도 지탱하지 못하기에 독재와 폭력에 길들여져 온 폭력경찰에 우리의 학우 강경대는 숨져갔던 것이다.

둘째, 현재 자행되고 있는 애국학생탄압은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수반한 조직적 침탈로 나타나고 있다.

노정권은 제4기 전대협을 자민통그룹의 배후조종을 받는 그 무슨 반국가단체라하며 4천만 애국민중과 백만학도로부터 분리시키려 발악을 하였으나 오히려 전대협은 당당하게 제5기의 깃발을 힘껏 움켜쥐고 통일조국의 새지평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조직적 침탈은 조직사건을 통해 상층지도역량을 분쇄하는 것으로 노정권의 계략은 드러난다. 검찰, 경찰, 안기부, 기무사, 내무부등을 동원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각 대학 총학생회장에서부터 전대협의장에 이르기까지 공식수배와 검거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더 이상 민주에 뜻이 없고 자주를 배격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노정권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에 불과함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노정권이 물리적 탄압과 함께 학내통제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이제 노정권의 청년학생에 대한 야수와 같은 폭력탄압은 일상화 되었으며 탄압양상이 교묘하게 발전, 학내 백색테러조직과 우익단체의 학내준동이 공권력과 결합하여 청년학생과 학생회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 동우전문대사건에서 보여지듯이 노정권과 조직폭력배, 학내테러조직이 연계하여 자행하는 테러와 폭력은 학원을 더러운 분열과 독재, 독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전대협과 학생회를 범죄단체화하는 것과 화염병처벌법등 기층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는 것은 노정권의 단발마적인 최후의 발악임을 알수있다. 노정권의 이러한 탄압형태는 백만학도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거세되어질 것이다. 아울러 1백30여개대 총학장단 회의를 통해 학내에서의 외부행사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학원마저 5공으로 회귀시키고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노정권의 학원탄압의 신종정책이라 하겠다.

넷째, 전대협과 백만학도는 노정권의 애국학생 탄압이 미국과 노태우일당의 장기집권, 영구분단 음모에서 가속화되어가는 민족민주운동 탄압임을 직시하고 우리의 요구와 결연한 입장을 함축적으로 밝힌다.

전투경찰과 백골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전경과 백골단의 임무가 아니라 미국과 노정권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하였으니 더이상 애국민중에게 고통과 죽음을 강제하는 전투경찰과 백골단을 해체하고 그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

전대협은 故강경대학우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이며 백만학도의 힘으로 즉각적인 노정권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故강경대학우의 뜻을 이어받아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정권퇴진의 그날까지 백만학도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헤쳐나가 민족해방, 민중승리를 기필코 안아올 것이다.

사천만 애국민중이여! 전국의 백만청년학도여!

피를 토하며 머리가 깨어진채 쓰러진 꽃다운 나이의 故강경대학우의 죽음은 슬픔과 분노만으로 조국의 암울한 장막을 걷어낼 수 없다. 누가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해 자신의 총학생회장을 구출하겠다고 나선 젊은이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독재와 분열이 판치는 식민지조국일지라도 우리 청년학도는 이에 언제나 의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춘이 쓰러져 그 자리에 피워오른 자주의 횃불과 민주의 씨앗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쳐 통일의 봄을 노래한단 말인가?

전대협의 백만학도는 확신하고 다짐한다.

故강경대학우의 죽음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조국이 통일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5·1절과 5·9민자당타도투쟁으로 힘차게 노동자학생연대를 이루어 내며 5·18광주학살의 배후조정자 미국축출투쟁을 힘차게 벌여 낼것이다. 또한 우리 백만학도는 5·11전대협출범식을 불원천리달려가 전대협의 자랑찬 위용을 과시하며 노정권에 심판의 불벼락을 내릴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의 가슴을 쓸어내고 사천만 애국민중과 백만학도는 91년에 민자당을 패퇴시키고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정부 수립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애국민중의 완전승리에 백만학도는 선봉이 되어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것이다.

—백만학도는 분노한다.
애국학생 살해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백만학도는 규탄한다.
학원탄압 자행하는 노태우정권 끝장내자!
—백만학도는 심판한다.
장기집권 획책하는 노태우정권 박살내자!

자주민주통일진군 47년 4월27일

구국의 강철대오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